

#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구촌시민운동

유재현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 I. 지구촌 시민사회: 현실인가 신화인가?
- II. 세계적인 시민운동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
- III. 세계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이유
- IV. 한국의 시민운동을 국제화하는 방안
- V. 세계NGO대회를 통해서 본 한국시민운동의 국제적 위상
- VI.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환경운동의 6대 과제
- VII. 결 어

## 1. 지구촌 시민사회: 현실인가 신화인가?

지구 전체를 한 눈에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아폴로 우주선이 하늘에 떠있는 작은 공과 같은 지구의 모습을 찍어 왔을 때 세상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뿐인 지구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지구환경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지역사회운동의 지도자들은 지구전체의 문제를 해결하여 온 인류가 그리고 우리의 자손 만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개인과 동네의 이해관계만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러한 시대의 시민운동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지구화 시대의 지도자들은 그 이전

의 시민운동 지도자들과는 근원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세상사람들이 지구환경문제를 생각하게 된 것은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지구적 스케일로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후레온가스로 인한 오존층파괴 문제도 예상할 수 없었고, 온실가스의 과도한 방출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열대 우림의 파괴가 지구의 허파에 구멍을 뚫는 문제로 인식할 수가 없었다. 전세계적으로 담수가 부족하고 식량 에너지 문제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도 요즈음에 와서야 비로소 알기 시작했다.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의 경우도 직접적인 피해에서 간접적인 피해로 그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20여년전 뉴욕인지 런던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곳에선가 사용한 후레온가스 때문에 오늘날 남극상공의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고 그로 인해 호주지역의 주민들이 피부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배 이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후레온가스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유럽이나 아시아 여딘 가에서 사용한 화석연료 때문에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온실가스의 감축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국제 정치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하나뿐인 지구를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각성이 일게 했으며 1972년과 1992년 두차례에 걸쳐 지구환경에 관한 UN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특히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UNCED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21세기 지구행동강령이라고 부르는 의제21을 제정했고 9개의 주요 그룹들이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행동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 당시 3만 여명의 민간단체 운동가들이 모인 지구포럼(Global Forum)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채택하여 사용했는데 그 것은 지구화와 지방화의 관계를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언으로 지금까지도 인구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

하나뿐인 지구를 구하는 일은 지구차원의 영웅이나 국제적인 인물들이 하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며, 그 장소도 국제적인 무대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그 곳에서 실천하면 된다고 하는 귀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참여에 의한 사회개혁운동은 이제 전세계로 널리 퍼지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체제와 이념은 달라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정도에 관계없이 폭발적으로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갑자기 20 세기말에 일어나고 있는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제 분야의 사람들이 토론하고 협력하며 책임을 지는 활동은 어쩌면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오래된 문명의 전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세계시민들이 모여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 데 왜 갑자기 세계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세계시민운동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사실상 시민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와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세계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20세기말을 규정하는 최첨단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운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생소한 말이고 각자 쓰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시민운동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그 동안 세계시민사회의 주된 흐름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의 경우는 세계시민운동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운동의 대열에 이제 겨우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한국의 시민운동을 어떻게 세계적인 운동에 접목시켜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세계화를 이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1990년 뉴욕 세계아동정상회의를 필두로 하여 1992년 리우 환경과 개발회의, 1993년 비엔나 인권회의, 1994 카이로 인구회의, 1995 코펜하겐 사회개발회의, 1995 북경 세계여성대회, 1996 이스탄불 세계거주회의, 1996 로마 식량정상회의, 1999 헤이그 평화대회, 1999 서울 NGO세계대회 그리고 1999 몬트리올 국제대회 등 90년대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열린 주요 세계대회에 민간단체들이 수만명씩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다. 이처럼 지구촌 시민사회는 현실이다. 다만 문제는 아직까지 한국의 시민단체들에게는 그러한 현실이 실감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1999 서울 NGO세계대회는 한국의 시민운동이 세계속에 발돋움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되었다. 이 대회를 통해 한국의 NGO들은 말로만 듣던 지구촌 시민사회 즉 Global Civil Society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세기 마지막인 작년 12월 씨애틀에서 열린 WTO회의가 NGO들에 의해 사실상 무산이 되고 만 것을 보면서 이제 21세기는 NGO들이 움직이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이 실감이 났다.

## II. 세계적인 시민운동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

각국별로 전개되어 온 시민사회운동이 왜 세계적인 규모로 활동하는 게 필요해졌는가? 그 배경을 먼저 알아보자. “국경 없는 경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듯이 세계경제는 이제 하나의 지구 경제권 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자본과 기술의 이동 때문이다. 상품의 교역은 식민지시대 이래로 지속된 관행이었으나 이제는 국경을 넘는 자본의 위력이 국경개념 자체를 무색케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세장벽도 무역장벽도 점차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협상이 모든 경제 문제의 규범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나누어 생산되는 부품들이 제3의 나라에서 조립되어 전 세계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상품이라고 말한다는 것조차도 점차로 의미가 없어져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생산 방식은 각 나라로 하여금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에서 살아 남으려면 세계적 감각을 가지고 매사에 대처해야만 한다.

그리고 불력화되고 있는 경제권과 지구경제화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국경이 없어져가고 있으나 이제는 EU의 등장으로 정치적으로도 국경이 없어져 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제는 하나의 지구경제에서 하나의 정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경이 남아있는 상황하에서도 정치 군사 외교적인 동맹관계와 정치적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한 나라의 정치적 변화가 바로 다른 나라의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자간 안보협약기구의 등장이나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긴밀한 정상회담 등은 이제 정치영역의 세계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으며 민족국가의 개념 자체가 퇴색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폭넓은 국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90년대의 수많은 국제회의에서도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 지구의 운명을 논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협약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전과정에서 세계 시민단체들의 영향력과 실질적인 기여가 절대적이었다. 세계화시대의 주된 흐름은 시민의 참여와 민간의 역할 강화에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가? 그 요인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족국가의 역할이 세계기구나 세계협약에 의하여 점차로 제약을 받고 있어

그 힘이 약화되고 있고 각국정부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지구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극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적 자원의 제반 문제해결의 주체는 이제 정부가 아니고 세계시민들이 참가하는 세계시민운동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번 리우회의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듯이 각국정부는 지구환경보호라는 명분보다는 당연히 국가적 이익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시민운동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점이다. 지구전체 시민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각종 세계협약의 체결과정을 더 이상 정부대표단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세계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세계무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이 국경이 없는 경제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각국정부는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대해 규제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감시는 세계적으로 조직화된 세계시민운동만이 담당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각종협약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협약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환경기준이나 규제방법이 선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많은데 이러한 협약들은 특히 다국적기업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협약의 기본골격을 구성하는 내용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입김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국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환경을 명분으로 하는 세계적 규제를 통해 자국기업의 이익을 보다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정부와 다국적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순수하게 지구환경을 구하고 인류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한 순수한 운동을 맡을 사람들은 시민단체들 뿐이다.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세계회의에서 민간단체들에게 발언권이 점점 더 강하게 부여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그만큼 민간단체의 책임이 더 막중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적인 역학관계는 새로운 세계권력의 3분법에 의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것은 첫째 국제기구나 국제협약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정치권력 (Global Political Power)과, 둘째 국경 없는 경제구조 속에서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의한 세계적인 자본권력 (Global

Economic Power)과, 셋째 자생적으로 세계각국에서 생겨난 시민단체들이 자연스럽게 연대를 형성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지구시민사회 권력 (Global Civil Society Power) 이다.

### Ⅲ. 세계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이유

시민사회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지 이제 불과 20내지 30 년밖에 안되었지만 그 동안 국내외 정치의 동향이나 기업의 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소련과 중국을 위시하여 동유럽 공산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여 그 동안 국가주도의 계획경제가 힘을 잃게 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개발도상국가들도 더 이상 성장위주의 개발독재 방식을 지탱하지 못하고 부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의 파괴와 불공정한 분배과정에서 야기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구미 선진국가들에서도 복지국가의 신화가 깨지기 시작했다. 이제 국민국가들은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에서 예외 없이 사회적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활동에 절대적인 제약을 받고 있던 구 공산권 또는 구 독재국가의 시민단체들은 이제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과거의 체제붕괴로 인한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유일한 이념과 사상체계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논의되는 각가지 이론과 주장들을 접하면서 순식간에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서 전개되고 있을 때 세계시민들은 이제 세계시민으로서의 소비자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국제연대를 통해 세계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산이 된 상품에 대해 국내적으로 수입을 거부하는 운동이 여러 곳에서 성공을 했고 그 물결이 다른 나라로 번지고 있다.

시민운동의 국제적 연대는 그 동안 국내적으로 불가능했던 개혁운동들을 성공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네팔의 아동노동력 착취에 대한 반대운동이 국내적으로 탄압만 받고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으나 이 문제가 국제적이 이슈가

되어 여러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하면서 국면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인권운동단체들은 미국의 의회를 움직여 “아동노동력을 착취하여” 생산된 카페트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네팔에서의 아동 노동력 착취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의 전망을 보이게 되었다.

이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가장 효율적일 뿐만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이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 왜 시민사회가 갑자기 이처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전통적으로 국제관계는 정부 당국자들이 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계화는 국가의 권력엘리트의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세계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민간단체의 교류는 이제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각종 세계협상과 세계정치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치 자유상인들의 조직체인 “길드”의 발달과 인적, 자본적 교류확대라는 민간의 자유스러운 거래가 중세봉건사회를 무너뜨렸듯이 시민사회의 세계화는 이제 세계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 나라가 갈등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것은 그 자체가 역사적인 국제관계였는데 왜 새삼스럽게 최근에 와서 세계화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단어로 인식되고 있는가? 과연 과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이처럼 커지게 된 사회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세계각국 운동가들 간에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시민이 해외 여행을 한다는 것은 아주 제한된 일이었다.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해 이동시간이 짧아지고 초음속비행기, 고속전철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진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88년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이후 일반인들의 해외 나들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그로 인해 사고방식에 있어 세계적인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힘은 국내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세계 항공사의 치열한 경쟁은 비행요금의 인하를 초래했고 선진국 시민단체들의 의식개혁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운동가들의 항공요금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늘어났다. 또한 UN의 비정부기구연락사무소 (UN NGO Liaison Service)는 주요 국제회의에 개도국의 민간대표들을 초청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민간단체의 대표들이 긴밀한 인적 교류를 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운동가들이 이처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친분을 돈독히 함에 따라 국제적인 운동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필요한 때는 언제나 전화와 팩스로 간단히 설명만 해도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실제로 국제적인 압력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인적교류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정보통신의 혁명이다.

둘째, 정보가 순간적으로 전세계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통신수단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참 후에야 전달되는데 비해 이제는 국제전화, 위성방송, 팩시밀리 등에 의해 정보가 순간적으로 전달된다. CNN이 상징하듯이 전세계는 이제 하나의 동시 통신권이 되었다. 이제는 전쟁의 정보가 격전지 현장에서 생방송 되고 있을 정도로 통신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정부의 고위당국자나 전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손쉽게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다.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과거에는 정부의 의사결정구조가 작동하여 대처하기도 전에 일반시민들이 TV 뉴스를 생생하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되고 정부당국자보다도 먼저 매스컴이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러한 통신혁명으로 인해 전세계는 이제 한마음이 되었다. 지구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순간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는 거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위치보다는 시간이라고 하는 상대적 위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한편 인터넷과 같은 국제 전자통신이 보편화되어 세계 어디를 가나 자유롭게 개인통신이 가능해지고 핸드폰을 통해 세계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수시로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노트북컴퓨터는 이제 단순한 가방과 같은 정도로 국제운동가의 필수 휴대품이 되었고 어디에 도착하든지 우선 전화라인을 찾는 세상이 되었다. 세계적인 규모와 조직력을 가진 단체들은 국제회의가 열리는 어느 곳에도 운동가들을 파견하여 의사전달을 할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들이 본국과 교신을 하기 전에 이미 평가자료를 전세계 매스컴에 돌릴 정도로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프랑스의 핵실험에 항의하는 그린피스와 활약상이 연일 세계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항의성명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계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민간단체라는 점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언어의 장벽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을 보면 이상한 동



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직접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해 속에서 갈등을 겪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세계시민들이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공식적으로 세계어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큰 불편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영어가 필수 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시민운동의 현장에서 공통어가 된 영어는 세계 시민운동의 결합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수백 가지의 언어의 차이 때문에 정보의 교류가 어려웠던 과거에 비해 이제는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해 거창한 동시통역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이제는 간단한 FM송신기에 소형라디오만 있으면 부분적인 동시통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활발하게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모든 세계시민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세상은 통역의 시대에서 직접 대화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바벨탑의 시대에서 이제 말이 통하는 진정한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상의 변화들은 지구시민사회운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장밋빛 그림만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배경이 없이 만들어진 자생적인 모임이 정부와 기업과 대응하여 싸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민사회운동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운동이 갖는 구조적인 약점은 바로 자생적인 운동이라는 점 그 자체에서 생겨난다. 지역중심의 주민운동이든지 각국의 입장에서 생겨난 전국적인 운동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통적 주제를 중심으로 엮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속력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 전세계의 민간운동가들이 모여 세계시민의 입장에서 무언가 지구적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연대와 공감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를 통해 각국의 그리고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 각 단체의 문제는 결국 각 단체들이 국내적인 여건에 맞추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구시민사회운동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비슷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쟁방법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지역운동을 지원하

는 일이다. 예를 들어 「세계 골프 안치는 날 운동 (No Golf Day Campaign)」같은 운동은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외롭고 힘겨운 투쟁을 해왔던 지역운동가들이 세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연대를 함으로서 고급정보를 공유하고 투쟁의 노하우를 전달함으로써 결국 지역사회운동을 본격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 Ⅳ. 한국의 시민운동을 국제화하는 방안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이제 하루 속히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민족국가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국가간의 갈등은 점차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얼마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세계적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세계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 사이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단체들이 이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단체들은 어째서 그 동안 세계적인 흐름에서 제외되어 있었는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독재정권 하에서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민주화 투쟁을 주된 과제로 하고 있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회운동이 자연히 반정부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탄압을 받았고 해외운동에 관한 정보조차 얻기 힘들었다. 많은 사회운동가들은 국내적 이슈를 가지고 운동하는 데도 벽찼기 때문에 영어로 자료를 보거나 영어로 말을 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개방화된 시점에 와서도 국제무대への 진출을 어렵게 생각하게 되었다.

민간운동이 그 동안 우물안 개구리처럼 고립되어 왔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현재에는 더 이상 그럼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적인 공조체제로 움직일 만한 사안이 발생하면 세계적인 단체들로부터 팩스와 서류들이 날라 들어오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세계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고 있는지를 외국단체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비로소 알게되는 일도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선진국도 후진국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입장이 미묘한 한국이 세계 무대에 참가하지도 않고 참가하더라도 한마디 발언도 제대로 못하는 한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된다. 한국의 민간운동이 더 이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의 대접을 세계사회에서 받고 있다는 점을 이제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재야와 대학생들과 결합을 통해 이 땅에서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해왔다. 이런 정도의 혁명적인 업적은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이 시민운동이 갖는 세계적인 선진성이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접목만 되면 세계시민운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민주화를 이룩하고 시민사회개혁에 앞장섰던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을 조화시키는 임무를 스스로 맡아 세계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그리고 아시아 전체에서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중국과 일본이 아직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시민의식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시아 각국들이 대동아 공영권의 악몽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 경제력이 약하고 시민사회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 와서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세계시민사회운동의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은 이제 유엔개발계획(UNDP)의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역할을 바꿀 것을 요청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내의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폭을 넓혀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선진국의 원조와 협력에 의해 뛰어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여 제3세계의 모범이 되어 왔으나 이 과정에서 한 국민의 자체적인 노력과 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덕적 책임을 스스로 맡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고 기업과 민간단체들의 공동의 참여를 통해서 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추상적인 논의의 수준을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 한국의 기업들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거 진출하고 있고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도국의 노동자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어 한국과 개도국간

에 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노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태발생 후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충분한 대처를 하는 예방적인 대책을 세워서 문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시아 각 국가들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고 우리의 공동의 미래를 같이 건설해야 한다는 공동체의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사적으로 그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역으로서의 협력체제는 만들어져있지 않다. 그 이유는 단지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반세기동안 실질적인 교류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상호관련성이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교류와 협력이 거의 중단되어 버렸다. 그러나 다행히 90년대에 들어서서 비로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참가하는 많은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다. 특히 환경문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견제와 비판은 물론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협력모델을 만들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V. 세계NGO대회를 통해서 본 한국시민운동의 국제적 위상

한국시민운동의 국제화 세계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1999 서울 NGO세계대회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이 기회에 한번 평가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을 보인다. 우선 NGO세계대회의 공동사무총장 겸 프로그램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큰 보람이 있었던 대회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NGO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도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몇 가지 의미를 짚어보면,

첫째 한국 NGO들의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NGO들은 국내문제에 팔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NGO들이 극소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외국의 주

요단체들에게 우리를 알릴 기회가 없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외국의 주요 NGO지도자들을 한국의 운동가들과 만난 것을 매우 “영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존경심을 표했다. 특히 군사독재하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민주화를 쟁취한 엄청난 사회적 동력들이 이제 시민사회운동의 주요 지도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의 활동상은 무척 감탄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단체들이나 인사들과 교류해왔던 국제 NGO들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국제적인 NGO 지도자들의 활동상을 폭넓게 보고 들음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동안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 활동가들의 입장에서 일종의 특권이였다. 우선 단체의 규모 자체가 커야 엄두라도 내볼 수 있는 일이고 그나마도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였다. 매우 부지런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들의 운동을 소개하고 대화를 하는 외국운동가들의 자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많은 지도급 인사들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발표문들은 귀한 지침이 될 수 있었다.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 며 현재 유엔인권위원회 고등판무관인 메리 로빈슨 여사 등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을 수십명이나 우리 활동가들이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인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양적으로 볼 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의 하나로 인정받았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지구적 규모의 많은 세계대회가 열렸었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UNCED 지구정상회담)를 비롯하여 WSSD (사회개발정상회담), WCW (세계여성대회), HABITAT II (세계도시정상회담) 등의 세계적인 회의에서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세계적인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었다. 이러한 세계대회는 유엔이 주관을 하는 것인데 같은 기간동안 민간단체들이 이른바 평행회의(Parallel Meeting)를 주최하여 수만명이 모이는 지구촌시민포럼(Global Forum)형식의 회의들을 해왔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의제도 정하고 자금도 마련하는 경우는 대회규모가 매우 작은 것이 보통이였다. 그러나 금년 여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 (HAP, Hague Appeal for Peace)는 순수하게 민간이 주도해서 만든 세계최대규모의 민간회의로 약 8-9천명의 자발적인 운동가들이 참석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서울 NGO세계대회는 7-8천명이 참석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주도의 글로벌 포럼으로 인정받았다. 국제대회 경험이

많은 외국참가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운동가들이 이처럼 큰 규모의 세계대회를 치루는 과정을 매우 경이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넷째 NGO세계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NGO라는 단어는 유엔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정부대표단이 아닌 모든 회의 참가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실상 그 범위가 너무 넓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사용하는 시민단체라는 용어와 비교할 때 그 의미의 차이가 매우 컸다. 특히 재야단체 관련단체 봉사단체들과 구분하여 시민운동단체라는 영역을 독자적으로 구축해왔던 90년대의 이른바 신사회운동 그룹들의 입장에서는 세계 NGO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운동 주제와 방식들에 대해 그리 익숙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른바 순수한 NGO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다양성에 대해 인정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해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인권운동단체들의 문제제기와 불참 그리고 장외전시 및 캠페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야말로 자율적이고 다양한 민간 운동의 특징을 더욱 더 잘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누구도 다른 단체의 활동에 대해 폄하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일반시민들에게 시민운동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본격적으로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NGO라는 단어가 국민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물론 시민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있었으나 세계적인 NGO 지도급 인사들의 동정이 연일 신문과 방송에 보도됨에 따라 시민운동에 대해 관심이 더욱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비록 대회 기간 중에는 일반인들이 참여가 별로 없는 운동가 활동가들만의 대회이기는 했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성원을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67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은 대회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고 시민사회를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한국에서는 정치권이 너무나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어서 반사적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기대가 커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시민운동이라는 하나의 영역이 정부와 기업과 대등한 제3의 권력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우리의 책임도 커진다.

여섯째 자금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행사의 재원이 어느 한 곳에 의존되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

가에 대해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스스로 자금을 만들 수 없는 시민운동은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다.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자금이 조성되어 시민사회가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시민운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NGO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NGO들은 대체로 90년대에 본격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우선 연륜이 짧다는 한계가 있다. 그 때문에 전문성이 외국의 주요단체들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수십년간 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해온 전문적인 활동가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루 속히 그러한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다. 이를 위해 NGO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여러 대학에서 NGO대학원이나 특수과정들이 생겨나고 있어 매우 다행이다. 특히 국제적인 운동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어훈련과 이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단체에 연수를 보내 현장에서 실전 훈련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는 운동가들의 직접교류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99 서울 NGO세계대회는 한국의 시민운동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는 내부적인 역량도 충분히 성숙되었고 국제적인 도약의 발판도 마련되었다. 이제 남은 일은 NGO들도 보다 투명하고 보다 책임적이고 보다 윤리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대회의 구호처럼 뜻을 세우고 (Inspire), 힘을 모아 (Empower), 행동하는 (Act) 시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Ⅶ.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환경운동의 6대 과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운동은 단순히 환경전문단체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모든 사회단체의 공동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운동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피해자로서의 지역 자구 운동

한국에서는 60년대 부터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화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기업이라는 인식 하에 공단부근의 주민들의 항의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

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단위 운동은 지역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격렬한 시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공해문제를 다루는 사회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공해추방 운동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또한 대도시에서는 교통혼잡,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각종 사회단체들이 대도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 거대한 댐의 생태계 파괴문제를 제기하는 운동, 골프장의 과도한 건설에 반대하는 운동, 각종 강살리기 운동 등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지역운동들은 안면도나 굴업도 핵폐기물 반대운동에 이르기까지 주로 지역단위의 피해 지구책 및 피해의 사전 예방 운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들은 이제 지역이기주의라는 반격을 받고 있다. 이른바 NYMBY ( Not In My Back Yard ) 현상, 즉 우리가 사는 곳에는 안된다 라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공장이든, 쓰레기장이든, 발전소이든지 간에 아무 곳에도 새로 설치할 수 없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바로 경제활동 자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지역 단위 운동이 이와 같이 독자적으로만 전개될 때는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시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개별적인 행동으로 고립되어 해결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이러한 지역단위 공해추방운동이 갖는 또 하나의 결함은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단지 반대만을 한다는데 있다. 공단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화학 위주의 대규모 공해산업이 문제의 원인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일반 시민의 소비 상품이든, 또는 외화 획득을 위한 수출 상품이든지 간에 공장을 함부로 폐쇄 할 수는 없다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공해방지 시설을 충분히 갖추려면 막대한 시설 투자및 운영비 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는 재산성 악화로 인해 노동자 임금의 억제, 소비물가의 인플레이라는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즉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이 사실상 막대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지 기업 자체의 경영에 큰 압박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언제나 비용 부담을 사회에 전가시킬 수 있으며 최종 부담은 언제나 소비자가 지게 마련이다.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도 적지를 찾기가 힘들고 매립장 반대운동으로 인해 지역 지정도 점점 어려워진다. 환경운동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전문적인 자문



을 해주고 그들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성숙한 민간 환경운동은 정부와 기업 지역주민들간에 생기는 갈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국민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어야 한다.

## 2. 가해자로서의 생활방식 변화운동

시민 스스로가 환경오염의 주범일 수가 있다는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생겨났다.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무절제한 전력의 사용증가, 자동차 사용증가, 1회용품 사용증가 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생산과정에서의 공해배출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자원 재활용 운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이 사회적인 호응 속에 폭 넓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육류 소비량의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자. 선진국의 육류 소비량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10배정도 높다. 세계인구의 4분의 1에 불과한 육류 과소비 집단들의 고급식탁을 위해 세계 인구수의 2.5 배가 넘는 130억 마리의 가축들이 사육되고 있는데 이 동물들을 기르기 위해 사용되는 사료용 곡물은 전세계 곡물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가축 사육지는 또한 과도한 분뇨의 방출로 직접적인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결국은 토지를 죽게 하여 경작지의 사막화를 촉진시킨다. 그 결과 식량문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가 시사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육류섭취 행위가 지구환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류섭취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동차 경우도 아무리 공해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해방지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이용의 증가 그 자체가 과도한 자원의 사용, 즉 철강 유리 플라스틱 등의 중화학 공업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가용 이용확대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 보급하지 않으면 급속한 환경오염을 막을 길이 없다.

특히 국제적으로는 선진국,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부유층들의 과소비 패턴이 바뀌

지 않으면 후진국과 저소득층의 문제는 더 악화 될 수 밖에 없다. 유엔환경 개발회의 의 의제 21의 초안에서 이러한 선진국의 생활양식에 대한 제한 조치가 제안되었으나 미국등 선진국의 반대로 최종합의문서에서 상당부분 삭제되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생활 양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환경문제의 본질은 단지 공업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공해물질의 축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자원 하에서 후세대까지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가 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감에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속도를 늦추고 생활의 편익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소비자체를 축소하려는 대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자원의 사용과 공해의 피해가 민족별, 계층별, 연령별, 성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나 남북간의 문제 계층간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에 대한 주된 책임이 선진국과 부유층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자인 시민 스스로가 또는 법규 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소비절약 생활양식의 변화를 이룩하지 않는다면 모든 환경운동은 겉치레에 불과한 의미없는 운동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환경문제가 사회정의와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환경문제가 급속하게 세계적인 관심꺼리가 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제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개발도상국들이 급속한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고갈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데 대한 지구차원에서의 위협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공해의 발생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속도로 자원소비가 일어나면 결국 치열한 자원 경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자원의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생겨 선진국들이 자원획득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그들의 소비생활 자체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국제적인 압력에 대항하여 후진국의 국민들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를 위해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개발권을 하나의 인권으로 설정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선진국의 어떤 압력도 후진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이유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진국이나 중진국들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지구를 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3. 전문가로서의 대안제시 운동

민간 환경운동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중의 하나는 전문성의 결여이다. 이른바 환경운동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는 단체들의 활동 내용을 보면 시위와 캠페인 그리고 강좌 등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된 전문적인 연구보고서 한 권을 펴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이 이처럼 치밀한 연구나 분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감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동안 정부나 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전문가들을 동원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전문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이유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환경문제의 제기가 결과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지 원인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시적으로 분명한 공해물질의 배출을 대상으로 항의하는 것은 단지 상식만으로도 가능하다. 자연을 사랑하고 동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운동도 감상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열심히 우유팩을 모아서 재활화장지를 만드는 운동도 주부들의 성의만 있으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체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것처럼 많은 선의의 환경운동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둘째 조직구성이 친목회 수준의 소규모 클럽 형태로 되어 있고 연간 예산이 수백만원 이상 되는 단체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별로 없다. 이와 같은 영세한 조직형태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은 몇몇이 모여서 작은 실천운동이나 의견교환을 하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소조직들이 수천 수만 개가 되면 그러한 힘이 모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엄청난 잠재력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주요 민간단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준비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셋째 환경운동이라는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 사회분야와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정책과 토지정책, 세제와 금융정책, 산업정책과 농업정책, 주택과 교통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는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가 불가능하다. 사회전체가 어떤 힘과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환경문제의 말단적 현상에만 시각이 집중되어 있는 게 우리의 환경운동이 아닌가 생각된다.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일정 수준이상의 조직과 예산을 갖춘 단체들이 늘어나야 하며 이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들을 소규모 단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가 만들어 져야 한다. UNDP와 YMCA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SD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는 매우 바람직한 시도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방대한 양의 최신 국제정보들이 한국어로 가공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효용가치는 전문가 몇 사람에게 한정될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환경운동단체들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자료들과 성명서들은 이제 어떤 정부에서 나오는 자료들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자료들을 만들어 낼만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환경운동이 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전환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전문성 확보문제는 이제 환경운동의 존폐가 걸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 4. 구매자로서의 기업압력 운동

기업집단들의 자본축적과 이윤추구 활동이 환경문제를 악화시키고 주범이라고 하는 구조적 문제는 사회주의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부터, 즉 산업혁명의 태동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이데오르기 문제로 비약시키고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으로 분석해 왔던 그간의 좌경운동권 논리는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있다. 장막 속에 가려져 모르고 있던 소련 및 동구권의 환경문제는 자본주의 국가의 환경문제에 비해 더욱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경제붕괴 상태에 이른 요즈음 해결책도 거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 이후에 나타났듯이 서독에 비해 동독의 환경파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통일 비용

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도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한계를 들어내고 있는 좋은 예다.

그 주된 요인은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구매자이며 소비자인 시민들이 기업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데 비해 국영기업 위주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도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파괴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고려를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 단체들이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대체로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제품의 환경적 속성을 비교 분석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운동이다. 소비자 상품보고서 같은 형식으로 어느 제품이 환경적으로 건전한지 아니면 파괴적인지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건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수입농산물과 농업 가공품의 화학약품 오염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고하는 캠페인은 그 동안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소비자운동단체들이 벌이는 이런 운동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분석실험장비를 충분히 갖추어 볼 때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둘째는 소비자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을 선택적으로 취급하는 생산협동 운동이다. 무공해 또는 저공해 유기농산물 공급이 도시 농촌 직거래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게 하는 동시에 유기농업 농가의 재산성을 확보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생산협동 운동은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셋째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과정에서 심하게 공해방출을 하는 기업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상품불매운동을 벌이는 일이다.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는 구호가 단지 구호가 아니고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생존은 순전히 소비자의 구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경쟁사회일수록 특정기업에 대한 상품불매운동은 기업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이처럼 소비자의 측면에서 기업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환경운동을 전개하려면 기업의 생산과정의 개혁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한 인식은 자원의 획득과정에서부터 생산과 유통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 즉 소비자의 구매행위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문제제기와 개선 대안을 마련하

는 것이다.

그 동안의 환경운동의 대상이나 정부의 정책적 관심사가 최종단계 (End of Pipe)의 폐기물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가능한 개발의 본질적인 해결이 생산과정에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 총량규제를 하면 기업이 내부과정을 알아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의 규제가 정책적 효율성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기업을 규제하면 대체로 최종단계의 오염처리시설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술적인 대처를 하기 때문에 생산비만 상승하여 결국 원가의 추가부담으로 경쟁성을 잃거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생산공정상의 원료의 이용이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의 현재의 관행을 대폭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폐기물 발생후의 처리에서 폐기물 발생 예방 차원으로 압력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미국과 네델란드등 환경선진국 들의 대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원가도 절감하여 이윤이 오히려 상승하는 동시에 폐기물의 양을 대폭 줄이는데 성공하고 있다. 네델란드의 그린피스네는 조직의 주요간부들이 그린피스와는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 기업의 생산과정 개혁을 자문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논란은 있었으나 이제는 당연히 필요한 방식이라는데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과 민간단체의 관계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러한 방식의 전개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 5. 유권자로서의 정치압력 운동

환경보호 운동은 절대적인 타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한나라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무시하고 전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아무리 소비자의 힘이 크더라도 기업활동에 근본적 제약을 가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 집단이 기업 집단의 재정적 후원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정경유착의 정도가 심할 경우 환경운동은 다분히 정치적 성향을 띠 수밖에 없게 된다. 선진 국가들의 환경문제를 적어도 국내에 한정되어서 볼 때 비교적 많이 해결 되어 있다. 그 원인은 우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축적된

자본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화 공업화의 선진국가로서 우리보다 몇십년 전부터 환경문제에 관한 시민운동의 압력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공통적인 특징중의 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달성되었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언론자유, 즉 집회와 시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전제되어야만 충분한 시민의식이 형성되고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후진국일수록 시민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그 결과로 환경적으로도 후진국이 된다. 정치적인 압력의 수단은 다음의 3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유권자로서의 환경후보 지원 방법이다. 의회나 지방자치장 선거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환경보전적인 정책을 약속하는 후보를 지원하여 당선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재임기간 중에 약속을 지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공직자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물론 다음 선거에서 낙선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회나 지방의회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내에서 친환경적인 인사들이 많이 진출할수록 환경문제 해결의 전망은 커지게 된다.

둘째는 정부의 정책 개혁 촉구 운동이다. 환경에 관련된 각종 정책이나 법률 제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채택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특히 모든 정책의 결정과정에 시민의 입장과 지역사회 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이른바 상향식 정책 결정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환경정책이 마치 환경부의 정책인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본래 환경부는 그 출발이 보사부의 한 부서에서 환경청으로 독립했다가 국무총리 산하의 처로 승격이 되고 나중에 부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다분히 그 시각이 오염관리 수준에서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

한 나라의 국가 환경정책은 당연히 국가 전체의 경제개발 및 산업정책과 국토관리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현재의 환경청은 이러한 정책에 영향을 미칠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은 민간단체들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조직화할 때만이 가능하다.

셋째는 환경운동가들이 직접 정치일선에 뛰어드는 것이다. 스스로 정당추천 또는 무소속 후보가 되어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서독의 녹색당이나 스웨덴의 환경당처럼 환경보전의 녹색이념 정당을 결성하여 정권에 도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

법도 있다. 이러한 정치적 시민운동은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독재집단과 재벌집단이 중앙집권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시대가 지나고 지역에 뿌리를 둔 평범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환경보전운동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훈련을 받고 합법적 사회운동을 정착시키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좁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할 경우 보다 종합적인 과제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주요정당에 의해 영역을 잠식당해 결국 영향력이 축소되는 비운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독립된 환경당의 형식보다는 기존 정치권의 일부로서 환경문제를 주요한 정치적 과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 6. 국제환경운동과의 연대 운동

지구환경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각국정부의 이해갈등구조 때문에 많은 협상이 그러한 자국이익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순수하게 환경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환경단체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영향력의 정도나 주로 다루고자 하는 과제에 따라 다양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로 그들의 역할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제단체로서는 그린피스나 지구의 친구들과 세계야생보호기금(WWF), 제3세계 네트워크 등 잘 알려진 국제환경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전세계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전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 중에서는 생태주의적인 입장에서 '보호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지구 곳곳을 다니면서 과격한 방법으로 '현장투쟁'을 벌이는 단체가 있고 국제협상과정에서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가단체가 있다.

이러한 단체들과 한국의 단체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이 좋은가가 이제 중요한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은 크게 보아 이들 국제단체들의 지부조직을 만들어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부터 사안별 연대를 하는 방법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지부조직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이론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고 또 국제적인 현안문제에 대해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국제적인 회의참여나



행동보조를 맞추기 위해 드는 막대한 경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들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국내적인 호응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안별로 연대하는 것은 물론 큰 부담이 없고 그 사업자체가 반드시 장기적인 자금 확보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선 시작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저쪽이 주도하는 캠페인에 이름을 올리거나 FAX를 보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

구조적 연대이든 사안별 연대이든지 간에 우리의 전문성이 빨리 제고되지 않는 한 이들과의 실질적인 연대는 사실상 어렵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면 외국단체들이 보내오는 각종 현황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국제적 연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내적 정보교환 네트워크가 시급하다.

지구환경문제의 현실적인 갈등구조의 하나는 고도의 경제시장을 이룩하고 과도기적인 자원 낭비를 하고 있는 선진국과 경제개발을 겨우 시작하고 있는 빈곤국가간의 갈등이다. 선진국가들이 오늘날의 환경파괴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제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단체들로 바로 선진국의 환경단체들이며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막대한 환경운동 자금도 역시 선진국의 환경의식이 있는 인사들에 의해 조달된 것이다. 이처럼 파괴도 보호운동도 모두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 먼저 일어났기 때문이고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있는 연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후진국 또는 제3세계는 이에 비해 의식이 비교적 늦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급격한 속도로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원보유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국제적인 자원약탈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이다. 또한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인해 각종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경제개발의 시초부터 제동을 걸리기 되는데서 오는 불만도 가득하다.

이러한 점에서 제3세계국가의 민간환경단체들은 자국의 정부에게 압력을 가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선진국이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관철시키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UNCED 과정에서 제3세계의 민간단체들이 벌인 활동의 내용은 실로 괄목할 만하다. 몇년간에 걸친 이들의 노력은 결국 UNCED에서 그로벌 포럼을 만드는데 성공했고,

선진국의 양보도 얻어내는데 기여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국내문제에 한정되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이 지구환경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목재공업과 해외벌목사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해산업이 제3세계에 진출하여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어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한국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국제갈등 구조 속에서 수세에 몰리게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자국의 이익보호와 지구환경의 파괴 문제 속에서 민간단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충분한 논의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환경우선'의 원칙 하에 행동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는 아직 논의가 불충분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환경단체들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여 이론적인 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의 과제가 이제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환경운동단체들은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환경단체들과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한다. 중요한 점은 세계의 모든 환경운동의 연대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고 지구환경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우리의 미래는 공동의 것이기 때문이다.

## Ⅷ. 결 어

새 천년을 맞이하여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어찌면 우리에게는 새 천년은커녕 새 백년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무리 환경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해도 지구전체가 멸망하는데 한국만 예외적으로 살아 남을 수는 없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이제 세계는 하나의 경제권이 되었고 환경은 하나의 생태계 하나의 공동운명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운동 환경운동도 지구적 차원으로 전개해야 한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글로벌 시민사회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영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하며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항상 최신의 정보들을 알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상근자들 10년 20년동안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제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가칭 한국시민운동국제화협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상근자들을 훈련시키고 국제동향을 상시 파악하며 단체들간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인 일을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반은 정부에서 내고 반은 일반 모금으로 모아 객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자금은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기구와 다국적기업들과의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시민운동 환경운동의 국제화의 길을 너무나 멀고 험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2000년대에는 한국의 시민운동 환경운동이 지구촌시민사회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